

“7년 방치 문예기금 지방 중심 배분을”

유성엽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출연 적립금 130억 문화격차 해소 위해 사용해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출연에 의해 적립된 문예기금을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 정읍·고창)는 법령개정 이후 적립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출연에 의한 문예기금을 지역 문화 격차를 고려하여 지방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주변에 미술작품이 설치되기 시작했지만, 의무화로 인해 예술적 가치를 찾기 어려운 작품이 설치되는 등 부작용도 잇따랐다.

부작용 사례가 많아지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었다. 첫째로 약 1억4,000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었고, 올해까지 7년 간 적립된 금액은 약 13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건수도 2011년 2건에서 2017년 33건으로 급증했다.

제도 변경 이후 적립되는 기금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130억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이를 한 톨도 집행하지 않고, 기금운용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법령 개정 시 문예기금 용도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 함께 추가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사업에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그동안 적립액이 충분하지 못



“한반도 전쟁 위기 막아내자” 16일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 초기 집행이 어려웠고, 현재 집행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지만 적립액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부터 3년이 되도록 기금 집행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문체부가 사실상 문예기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건축주 출연 기금이

본래 목적에 쓰이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조속히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알뜰한 밑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특히, 문화예술관련 예산의 수도권 편중은 14년도부터 16년도 기준으로 지원금 총액 167억5,500만 원

중 서울이 무려 140억2,800만 원으로 전체 비율의 84%를 차지하고 있다”며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집행 과정에 있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고려하여 문화예술기금이 취약한 지방을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성 기자

동반성장위, 여전히 전경련 자금으로 연명

여전히 동반성장위원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조배숙의원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해체 요구까지 받고 있는 전경련에게 2017년 올해, 민간출연금 명목으로 20억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2018년) 정부 예산안 편성 또한 올해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전경련의 운영비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동반성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이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의 존재이유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은 “공정거래협약 조차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이 과연 중소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동반성장이 시대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자료에 대한 전면 공개 등의 지침 및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써의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 제고와 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반 하도급

지난 4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다룬 분쟁조정 건수가 8,164건에 달했고 하도급거래는 그중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사건 대다수가 하도급·가맹·공정 분야에 집중돼 있고 분쟁 조정률도 43%에 불과해 공정위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민의당 김광영 의원(전북 군산)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제출 받은 ‘분쟁조정 현황 자료’(2014~2017년 6월)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 거래가 3,691건(45%)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2,043건(25%), 공정거래가 1,968건(24%)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분쟁조정에 성공하는 사건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43.8%의 조정이 성립하는데 반해 11.8%는 조정 불성립, 48%는 중지로 사건이 종결된다. /김진성 기자

인권침해, 신고는 두 배 증가... 구제율은 반토막

최근 5년간 신고 건수 90% ↑ · 구제율 5.9%→3.2%... 이춘석 의원, “실효성 제고방안 절실”

법무부가 2006년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신고자 수가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데 반해, 구제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인권침해신고센터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1,374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2,620건으로 90%가 증가했다.

작년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교정과 관련된 것으로 2,252건이 접수돼 전체의 86%에 달했으며, 932건이 접수됐던 2012년에 비해서 2.4배가 증가한 수치다.

신고내용은 주로 교도관의 가혹행위·폭언, 의료처우에 대한 불만, 시설 내 부당한 징계처분,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편 등에 관한 것이며, 신고절차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경우엔 주로 편지 형식으로 받고 있고 수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화로 접수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급증하는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인용·구제율은 최근 5년 평균치가 5%를 밑도는데다가 그나마 2012년에 5.9%였던 것이 2016년에는 3.2%로 떨어지는 등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권침해센터가 실질적인 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 건수의

절반 내외는 법무행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각하를 하고 있으며, 신고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기각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가 단지 ‘탈검찰화’에서 멈춰선 안 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법무부의 역할과 기능들을 회복하고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며, “수사나 교정 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태에 대해서도 보다 더 효과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복지사업 부정수급·과오지급 2012년 이후 1658억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 지원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2012년 이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금액이 1,65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2년 이후 총 1,65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593억 원으로 전체 대비 35.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대상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 관리체계 강화로 부정·과오수급을 방지하고, 환수 대책 마련을 통하여 복지재정 누수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행복e음 시스템에 나타난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은 무려 1,658억에 달하지만 환수금액은 64.2%인 1,065억에 불과했다”며 “이는 부정수급·과오지급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새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케어로 일궈내려는 현재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원조달이다”며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정부의 복지사업 부정·과오수급 방지 및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제28회 **백제가요 정음사 문화제**

천년의 기다림
가요와 사랑으로
물들다

2017.10.20(금) ~ 10.22(일) 3일간
정음사공원 및 시내일원

주최 | 주관 정음사 | 후원 정음사문화재단

<p>10.19(목) 18:00~21:00 정음천변 어린이 육구장</p> <p>전야제 “달빛가요 SHOW” 송대관, 문희옥, 오로라, 동이문 DOZ, 김아라, 진정아</p>	<p>10.20(금) 16:30~18:00 정음천 이앙고~정음사공원</p> <p>정음사 거리 퍼레이드 공군악대, 꽃마차, 퍼포먼스팀</p>
<p>10.20(금) 18:00~22:00 정음사공원 특별무대</p> <p>정음사 열린음악회 홍진영, 박현빈, 오마이걸, 문연오르 온앤오프, 이진관, 레이디 티</p>	<p>10.21(토) 16:00~18:00 정음사공원 특별무대</p> <p>정음사 K-POP 페스티벌 청소년 Rock Band 한미당전치 -전라북도청소년교류지원팀-</p>
<p>10.21(토) 18:30~20:30 정음사공원 특별무대</p> <p>정음사 가요제 장윤정, 진 성, 솔 티, 이동준</p>	<p>10.22(일) 19:00~21:00 정음사공원 특별무대</p> <p>제회 정음사 Maple star 오디션 울랄라세션, 배기성, 서재이</p>

*백제가요 정음사 오솔길 길기 행사 10. 21(토) 09:00~12:00 정음사공원

| 2017년도 정음사 정음사문화제행사 보조근로 계약